

# 도교육청 “추경에 누리예산 포함해야”

### “예산 부담 여력이 전혀 없는데 국회가 이를 방관하면 과행 거듭할 수밖에 없을 것”

전북도교육청이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도교육청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의 누리과정 사태는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대표적 복지정책을 정부가 부정해 촉발됐다”며 “정부가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추경안에 누리 예산을 전액 반영해 사태 해결 의지를 보여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을 규정상, 또 지방교육재정 여건상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할 여력이 전혀 없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고 국회가 이를 방관하면 누리과정은 과행을 거듭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1일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전북 교육청은 지금까지 한결같이 법률이 규정하고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여기에는 1%의 타협의 여지도 없다. 정부가 100% 다 지원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고민형 기자



7일 전주 호자동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대강당에서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우리마을’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제3회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 송하진 도지사가 분야별 마을 만들기 우수사례 발표를 듣고 있다.

## ‘냉방기기 과열 화재 주의해야’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에어컨, 선풍기 등의 냉방기기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과열로 인한 여름철 화재가 우려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7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8시에 익산시 선화로의 한 학교에서 불이 나 90여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은 전날 하교하면서 커튼 벽걸이형 선풍기의 과열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3일에는 전주의 한 버섯재배사에서 버섯 재배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 켜놓은 선풍기에서 불이 나 128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북에서 총 27건의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기기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0건, 2014년 8건, 2015년 9건, 올 7월 현재까지 5건 등으로 집계됐다.

냉방기기 화재원인에 대해 선풍기의 모터 과열, 에어컨은 실외기의 전기 합선과 모터의 열이 축적되면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정영수 기자

## 새만금청-후이저우시 한중산단 MOU 체결

### 투자 등 상호 협력 통해 상생 환경 구축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과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의 한중산업협력단지 상호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중국 내 3개 중한 산단에 대한 MOU 체결에 성공했다.

7일 새만금청은 새만금 현청(군산 지스코, GSCO)에서 중국 광둥성 정부 관계자 및 기업 대표를 초청해 ‘새만금 투자환경설명회’를 개최하고, 광둥성 후이저우시와 ‘한중산업협력단지 상호협력력 위한 합의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광둥성은 장강삼각주(상해, 환발해만 경제권(천진, 북경)과 함께 중국 경제를 견인하는 3대 축으로 전자정보업, 전자제품기계업, 석유화학공업, 자동차, 건축재료 등의 산업이 활발한 지역이다.

이 지역은 중국 내에서도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특히 많은 지역으로 지난해 교역액은 2014년 대비 12.4% 감소한 638억불(수출 400억불, 수입 238억불)로 한중 교역액(2,273억불)의 28%를 차지한다.

한국의 대 광둥성 투자는 제조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주요 투자기업은 POSCO, LG디스플레이 등이다. 특히 후이저우시의 대한 교역량은 2015년 기준 162억달러로 광둥성 전체 무역액의 1/3을 차지한다.

전북도와 후이저우시가 이번 MOU를 체결함으로써 양 기관은 향후 한중산업협력단지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업 및 공동 관심사에 대해 수시로 협의하고, 투자유치활동과 관련한 사안에 상호 협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광둥성 후이저우시와의 합의서(MOU) 체결을 계기로 후이저우시를 비롯한 광둥성 정부와의 경제협력력이 보다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양 기관 간 상호협력력을 통해 한중산업협력단지 조성을 가속화하고, 새만금과 중국 투자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환경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한 산단 3개 지역 중 옌청시와 엔타이시는 한중산업협력단지 상호협력력을 위한 합의서(MOU)를 각각 지난 2월과 4월에 체결했다. /정영수 기자

## 물놀이 사망 38% ‘안전부주의’

국민안전처는 물놀이 사고로 지난 5년간 매년 평균 35명이 사망했다고 7일 밝혔다.

안전처가 물놀이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익수 등 사망자는 총 174명으로 집계됐다.

물놀이 사고발생 장소로는 하천·강이 53%(93명)로 가장 많았고 계곡 19%(33명), 해수욕장 13%(22명), 바닷가 21명(12%) 등이 뒤를 이었다. 사고 발생원인으로는 안전부주의 38%(66명), 수영미숙 30%(53명), 음주수영 14%(24명), 높은파도 및 급류 12%(20명) 등으로 안전수칙 무시로 발생한 사고가 많았다. /정영수 기자

## “김영란법 상한 10만원으로 통일일”

### 한국법제연구원 “현실성 없는 금액 제재 대상자 양산”

오는 9월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10만원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5월 시행령안을 발표하면서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부조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에 대해서는 각 3만원·5만원·10만원의 상한액을 정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현실적인 금액이 아니라는 지적과 함께 농·축·수산 및 화훼 농가 등의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책연구기관이 상한액 인상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7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주요 내용 및 쟁점’을 주제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에 대해 일률적으로 10만원이라는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를 담당한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전략분석실의 김정현 부연구위원은 자료를 통해 “허용 금품 기준이 각각 다를 경우 혼돈을 초래해 법 규범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상한액을 10만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그러면서 “무

엇보다도 법 시행 초기에 금품을 제공하는 자도 처벌된다는 점을 국민들이 모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허용 금품 금액을 현실성 없는 기준으로 정할 경우 법적 제재 대상자가 양산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10만원으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한 데 대해서는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 등의 수수는 형사처벌, 10만원을 초과한 금품 등의 수수는 과태료 대상이라는 법적 기준을 국민들이 확실하게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라고 설명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사립대 교수·연인인 등이 제3자에게 고액 금품(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는 내용이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부조 등 목적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내에서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공직자 등 뿐만 아니라 금품을 제공한 국민도 동일하게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 부연구위원은 “지나친 규제와 집행이 오히려 법률 규정을 사문화(死文化)하거나 탈법을 부추길 수 있다”면서 “이는 한국 사회의 부패 근절이라는 좋은 입법 취지를 갖고 출발한 청탁금지법을 무력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정영수 기자

## 전북 연일 폭우 농경지 84ha 침수

최근 전북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연일 쏟아지면서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7일 전북도와 전주상지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도내 대부분 지역에 다소 많은 양의 장맛비가 내렸다.

지역별로 누적 강수량을 보면 정수가 326.5mm로 가장 많이 내렸고 순창 323mm·진안 275mm·완주 283mm·남원 240.9mm·김제 238mm·군산 296.1mm·무주 231.5mm·익산 260.7mm·전주 222.5mm 등이다. 비 피해도 속속 집계되고 있다.

이날 현재까지 잠정집계된 피해상황을 보면 84.35ha의 농경지가 침수됐고, 3.8ha가 매몰됐다. /정영수 기자

특히 집중호우로 인해 군산 육구와 익산 인화, 김제 성덕·금산, 부안 백산 등에서는 침수 면적이 증가했다.

또 진안과 장수 등의 일부 도로는 유실되거나 토사가 유입됐고, 8건의 주택이 침수되거나 파손되기도 했다.

아울러 가로주 5주가 전도됐고, 부안 변산 격포항에 정박된 선박이 침수되는가 하면, 낙석이 떨어져 풍나물공장 일부가 파손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전주 상림동과 호성동 등 일부 구간 도로가 일시침수돼 교통혼잡이 빚어지기도 했다. 도는 침수지역 등에 대해 배수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인명피해우려지역과 산사태 취약지역 등에 대해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정영수 기자

전북도 공고 제2016-862호

### 『국가지질공원』인증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

「자연공원법」 제36조3에 의하여 국가지질공원 인증 신청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국가지질공원 인증 신청을 위한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청취
2. 공청회 개최 예정일시 및 장소

일시	부안군	고창군
장소	2016. 7. 26(화) 14:00 변산면사무소 회의실	2016. 7. 29(금) 15:00 고창군청 5층 회의실

※ 진행: 용역추진 경과보고, 전문가 주제발표, 토론 및 질의응답

3.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 개요

가. 공간적 범위: 고창, 부안군 주요 지질명소 일원  
나. 시간적 범위: 2015 ~ 2016년(2년)  
다. 주요내용

- 1)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지질명소 발굴 및 가치 평가
- 2) 지질공원 운영 및 관리 계획, 지질명소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등

4. 기타사항

가. 국가지질공원 인증 신청을 위한 이번 공청회에 대한 의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16. 7. 22(금) 18:00한
- 제출방법

- 서면제출: 전라북도청 자연생태과, 고창군 생물권보전사업소, 부안군 친환경축산과에 직접 방문제출 및 FAX(063-280-4169, 063-560-2739, 063-584-0955)로 전송
- E-mail: mcclave@korea.kr, kimjs9108@korea.kr, wtwsh66@korea.kr로 전송

나. 기타 문의사항은 전라북도 자연생태과(063-280-4178), 고창군 생물권보전사업소(063-560-2691), 부안군 친환경축산과(063-580-4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7. 전북도지사

#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